

제300호(2011. 3. 7)

■ 경제 동향

- 올해 국내경제 성장, 하반기 이후 긍정적 전망

■ 특집 / 2011년도 주요 건설 현안

- 공공공사 입낙찰 제도의 선진화 방안 모색 추진
- 건설 경기 위축에 따른 건설업계 대응 방향 모색
- 건설업체 경영 상태 악화, 종합 활성화 대책 강구
- 해외건설·녹색건설 등 기업 현안 분석 및 솔루션 제시

■ 정보 마당

- 미래를 생각하는 힘이 곧 경쟁력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건설산업의 미래를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올해 국내경제 성장, 하반기 이후 긍정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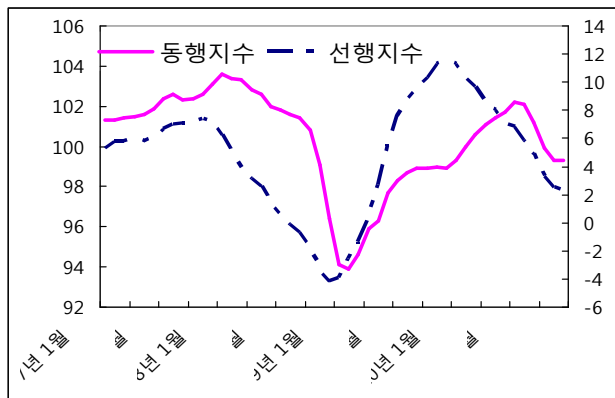
- 중동사태라는 돌발변수 등장, 해외시장 진출 기업의 다각적인 대응방안 필요 -

■ 최근 국내 실물경기, 상승세 지속 속 성장세는 둔화

- 대부분의 수요 및 생산지표들이 증가세를 지속하며 최근 국내 경기는 상승세 지속 중
 - 2010년 12월 내수 관련 지표는 전년 동월비 설비투자가 감소세를 보였으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소매판매액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활동도 반도체, 자동차, 운수 등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 실업률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12월 들어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다시 증가하며 고용지표도 회복세를 지속
 - 9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경기동행지수도 12월 들어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선행지수의 하락폭도 축소됨.
-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기의 둔화에 따라 국내 경기의 성장세도 함께 둔화되고 있음.
 - 중국 등을 중심으로 경기선행지수가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선진국도 회복세를 지속하여 OECD 전체 지수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기선행지수도 OECD 대비 빠르게 하락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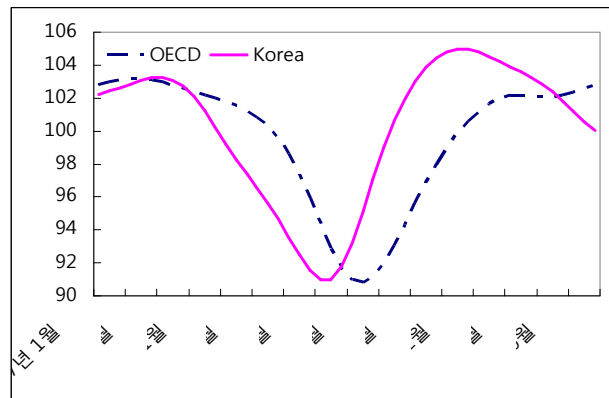
<경기종합지수 추이>

(단위 : %)



주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자료 : 한국은행

<OECD 경기선행지수 추이>



주 : Amplitude adjusted Composite Leading Indicators 기준
자료 : OECD Stat.

■ 유가 급등·물가 불안 등의 돌발변수로 리스크 증대

- 글로벌 경제가 돌발변수인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 급등, 증시 하락 등 불안 요인 확대
 - 2010년 12월 시작된 튀니지의 반정부 시위가 알제리(2010. 12), 이집트(2011. 1)로 전이
 - 2011년 1월 다부족 국가인 리비아로 확산되어 부족 간 갈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내전의 양상으로 전개됨. 석유 매장량 9위 수준인 리비아 사태가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음.
 - 연초 91.59달러/배럴로 시작한 두바이유는 2월 말 현재 107.41달러/배럴까지 급등. 중동 사태가 빠르게 진전되더라도 연초 예상했던 2011년 유가 전망치(에너지경제연구소, 2011년 1월, 89달러/배럴)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짐.
- 지속적인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내수 경기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존재함.
 - 유가 상승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 세계적 작황 부진에 따른 곡물가 급등 등 공급 측면의 강력한 물가 불안 요인이 존재
 - 국내적으로도 구제역 확대로 비롯된 농축수산물 가격 및 서비스요금 상승과 전세가격 상승 등 물가 상승 압력 상존

■ 돌발변수에도 하반기 이후 국내경제 성장은 긍정적 전망

- 상반기에 나타나고 있는 돌발변수들을 고려할 때, 2011년 경제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이후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
 - 중동 사태로 인한 단기적 국제 유가의 추가 상승은 불가피하지만, 핵심 산유국으로 민주화 시위가 전이되지 않는다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도 높음.
 - 돌발변수에도 불구하고 주요 해외 투자은행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중동 사태 진정 이후 하반기 경제 성장을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반영함.
- ※ 도이치뱅크 4.0 → 4.6%(’11년 2월), UBS 4.0 → 4.5%(’11년 2월)
- 그러나, 국내 건설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동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나라 해외건설 기업은 수주 감소 등에 대비해 시나리오별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짐.

허윤경(연구위원 · ykhur@cerik.re.kr)

공공공사 입찰제도의 선진화 방안 모색 추진

- 물량내역수정입찰제 · 순수내역입찰제 · 최저가낙찰제 등의 개선방안 도출 -

■ 물량내역수정입찰 도입,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으로 가격 경쟁 강화

- 최근의 공공공사 입찰제도가 가격 경쟁 부문이 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건설업체로서는 물량 부족과 더불어 저가 수주의 이중고를 겪을 전망이다.
 - 최근 300억원 이상(2011년은 5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 공사에 물량내역 수정방식이 도입되면서 입찰 비용이 증가하고, 인위적인 물량 삭감으로 저가 경쟁이 확대될 전망이다.
 - 순수내역입찰의 경우, 입찰자가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면서 입찰 비용이 증가되고, 부적정 공종수에 제한이 없어지면서 덩핑 경쟁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 설계 · 시공일괄입찰(턴키)은 적용 대상 공사가 크게 축소되고, 낙찰률도 최근 하락하고 있어 턴키 공사의 기술력 및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음.
 -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적가치낙찰제’도 지나친 가격 중시형의 제도여서 지방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 최저가낙찰제가 현재의 300억원 이상에서 2012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인 점도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 100~300억원 규모의 공사는 대략 시공능력순위 500~2,000위 업체의 수주 영역인데,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면 각종 저가심의에 소요되는 사유서 작성이 곤란하여 결과적으로 지방 중소기업의 수주량이 현격히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공공공사 최저가 입찰에는 보통 40여 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나, 향후 100여 개사가 참여하면서 낙찰률도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

■ 물량내역수정입찰 적용의 임의화 및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필요

- 우리나라의 공공공사 입찰제도가 글로벌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격 경쟁에 의존하는 형태에서 탈피해야 함.

※ 본 특집은 건설산업의 회생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1월 21일 개최된 <2011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현안 토론회>에서 발표된 주요 건설 이슈와 연구 방향을 중심으로 연구원의 4개 연구부서별로 정리 요약하였음.

- 물량내역수정방식은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물량내역수정에 따른 수량산출서 작성 등에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물량내역 수정이 효율적인 공사 등으로 국한해서 발주처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입찰자가 수정한 내역에 대해서만 설계변경이 불허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필요
- 순수내역입찰 입찰은 과도한 입찰 비용이 소요되며, 덤핑 투찰이 우려되고, 입찰자의 리스크가 크게 증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발주 규모의 최소화 필요
-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방침을 철회하여 지방 중소기업체의 고사를 방지해야 함.
- 선진국에서는 가격 중심의 경쟁입찰제도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종합평가낙찰제, 입찰VE방식, 기술제안입찰, 설계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 브릿징방식, 2단계입찰, 인센티브방식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공사 입찰에서 ‘운찰제’를 축소하여 기술과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를 우대하고, 제 가격을 보장하여 성실 시공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2011년 공공공사 입찰제도 및 건설산업 정책 관련 주요 제도개선 사항>

구분		내 용
국가계약법 개정	PQ 대상 및 기준 자율화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는 PQ 실시를 의무화하고, 기타 공사는 자율 부여 · PQ 심사 항목 및 배점 등을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순수내역입찰제의 도입 및 물량산출제도개선	·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를 작성 교부하되, 입찰자의 물량내역서 수정 허용 - 적용 대상 : 500억원 이상(2011년) → 300억원 이상(2012년) · 물량내역서를 미교부하는 순수내역입찰제도는 발주자에게 재량권 부여
	최저가낙찰제 확대	·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2012년부터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공사 보증시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및 계약보증금비율 하향 조정	· 모든 공사에서 연대보증인을 이용한 계약보증제도 폐지 · 턴키·대안입찰 : 공사이행보증만 허용 · 적격심사제 대상공사 : 15%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중 선택
	단품 물가 조정 대상 명확화	· 순공사 원가의 1% 이상인 자재만 단품 물가조정을 허용
	기술제안입찰 등의 확대	· 기술제안입찰제도의 적용 대상 확대 : 모든 공사에 적용가능하도록 규정
건설산업의 상생 협력 강화	하도급대금지급확인 확대	·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를 모든 공공공사에 확대 시행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개선 자재 발주자 직접구매제도	· 대금 지급 등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용 관련 기준 개선 검토 ·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120개 공사용 자재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 공급
지역·중소 건설업체 경영 환경 개선	건설공사 도급하한액 조정	· 지자체·공기업 발주공사의 경우, 대형업체 도급하한액(150억원) 상향 조정
	PQ 평가시 지역업체 시공참여배점제 도입	· PQ 평가에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예, 배점 5점) 신설, 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턴키 설계보장비 지급방식 개선	· 턴키설계보장비 지급 방식으로 설계점수 연동지급방식 도입
건설시장 질서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직접시공의무제 실효성 제고	· 발주자가 원도급자의 시공내역과 지출서류 등을 점검토록 하여 원도급자의 위장 직영 및 적발 강화 등 실효성 제고
	페이퍼 컴퍼니 퇴출 촉진	· 자본금, 기술능력 등 심사 기준과 절차 보완
	턴키 등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회제도 개선	· 턴키·대안입찰 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는 공사 유형이나 규모를 제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개선	· 계약이행 등을 감안하여 부정당업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과징금제도 신설
민간투자제도 개선	도시개발사업의 민간투자여건 조성	· 패키지형 도시개발방식 도입, 입체적 한지사업 활성화, 토지공급가격의 탄력적 적용, 건축허가절차 간소화, 임대전용 산업단지 활성화 등

최민수(건설정책연구실장·연구위원·mschoi@cerik.re.kr)

건설 경기 위축에 따른 건설업계 대응 방향 모색

-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등도 함께 추진 -

■ 경기 회복과 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부동산 시장제도 개선

● 최근 주택·부동산시장의 동향

- 국내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부동산 경기는 서울 일부를 제외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분양 적체나 미입주 물량이 여전한 실정임.
- 특히, 주택·부동산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대란 등 시장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나 분양가상한제 등 관련 규제는 시장 회복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하여 MB정부 핵심정책 중 하나인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저렴한 택지 공급과 분양 가격으로 민간 부문 수요까지 잠식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 강화로 금융시장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이 사실상 중단돼 부동산 개발사업은 좌초되는 경우가 많아 민간 부문의 위축 상태는 지속될 가능성이 큼.

● 문제점 및 파급 영향

- 국내 산업 및 경기의 정상적인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세제 감면 등 한시적 경기 부양 관련 정책이 만료되거나 그 시기가 임박하고 있어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거래 위축 현상은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주택·부동산시장의 조기 정상화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민간 건설업체의 수주 및 경영 상황은 위기에 노출되고 있으며, 공공 부문에 의한 시장 왜곡도 심화될 전망이다.

● 대응 방향

- 현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향후 방향성 제시, 주택·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보완책의 검토,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기초 평가를 통하여 합리적인 정착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보금자리주택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 민영주택의 경쟁력 확보방안 등과 같은 관련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안 이슈에 대한 시장 저변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임.
- 급변하는 시장 상황과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 이슈에 대해서도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조기 대응 체제를 구축할 예정

■ 국내 건설시장 성숙기의 본격 진입에 따른 건설업체의 전략 및 체질 변화

● 건설시장의 동향

- 2010년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1/4~3/4분기까지 비교적 양호(-0.5~1.0%)했으나, 4/4분기의 극심한 부진으로 2009년 대비 13.0% 감소한 103조 2,000억원에 그치고 있음.
- 공공 부문의 경우 2009년에는 재정투자 확대에 힘입어 급증하였으나, 가파른 경기 회복 이후를 대비한 출구전략의 필요성과 SOC 예산의 감소 추세 등으로 2010년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위축되는 양상을 나타냄.
- 민간주택 수주도 4/4분기에 57.3%가 급락하여 4/4분기 수주로는 9년 이내 최저치인 7조 2,000억원에 그치고 있어, 전체 건설 수주가 감소세로 전환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주택 수주 중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 재건축·재개발 수주가 공공관리자제도 시행으로 2010년 4/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8.0% 감소한 것도 큰 부담이 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1년 이후 중소 건설업체를 비롯한 건설업계 전반에 건설시장 위축에 따른 경영상의 부담 가중이나 수익성 악화 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문제점과 파급 영향

- 공공 부문의 경우 토목 수주의 부진 상태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큼.
- 민간 부문도 2010년대 중·후반 이후 인구 감소와 1~2인 가구 증가 등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지금까지와 같이 정부 정책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유지될 경우 건설산업의 성장은 차치하고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음.

● 대응 방향

- 건설시장의 정확한 동향 파악 및 진단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공공 부문 및 주택시장 등 국내 건설시장의 중·장기 전망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
- 건설시장의 구조 변화 등 시장의 현재 및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건설업체로 하여금 중·장기 대응 전략 수립 및 체질 변화를 유도할 있도록 정확한 정책 방향과 시사점 도출에 집중할 계획임.

두성규(건설경제연구실장·연구위원·skdoo@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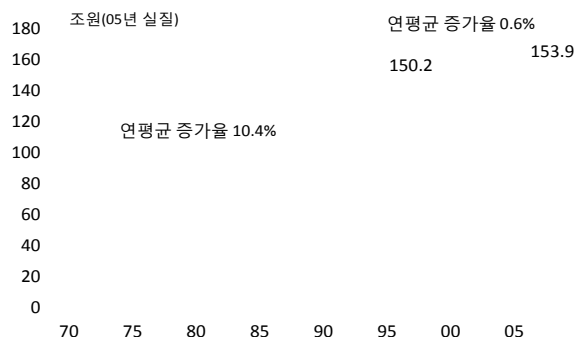
건설업체 경영 상태 악화, 종합 활성화 대책 강구

- 건설투자의 적정수준 유지 및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에 집중 -

■ 열악한 사업 환경으로 위기에 처한 건설산업

-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실질 건설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0.2%에 불과
 - 2005년도 가격을 기준으로 한 실질 건설투자 규모는 2008년 153.9조원으로 파악되어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의 시장 규모 150.2조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냄.
 - 같은 기간 동안의 연평균 GDP 증가율은 4.4%로 건설투자 증가율을 크게 상회
- 열악한 건설사업 환경으로 건설업체의 경영 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됨.
 - 적격심사 공사의 평균 입찰경쟁률이 200:1을 상회하고, 조달청 4~6등급 공사의 경우 평균 입찰 경쟁률은 무려 500:1을 상회하는 등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난 심각
 - 2010년 상반기에 수주 실적이 전무한 건설업체 비중은 무려 47%에 달함.
 - 주계약자 공동도급 등 생산 방식에 영향을 주는 제도의 도입으로 생산 체계 변화
 - MB정부 출범시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을 천명했으나, 핵심 규제는 온존한 상황
 -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확산으로 사업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음.
 - 젊고 유능한 인력은 건설업 취업을 기피해 40대 이상 기능인력의 비중이 75%에 달함.
- 갈수록 축소되는 공공건설 투자로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20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공사 범위가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임.
 - 2014년까지 정부의 SOC 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1.7%로 정부의 12개 재정지출 분야 중에서 최하위

<실질 건설투자 추이>



■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종합 활성화 대책 강구

- 건설생산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 변화 과정 및 요인, 선진국의 사례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의 제시
 - 직할시공제, 주계약자 공동도급, 파트너링제도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
- 각국이 건설시장 침체시 걱정된 건설투자를 유지하기 위해 강구했던 정부의 정책적 대응 및 산업 차원의 대응 노력을 조사하여 국내 적용방안 도출
 - 건설투자 감소를 불가피한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소극적 관점에서 탈피
- 건설 관련 규제 정책의 합리화를 통한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 모색
 - MB정부의 규제 개혁 성과를 평가하고, 현장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는 규제를 조사해 개혁 대상 규제를 발굴 제시함.
- 하도급자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 대책 근절 대책 모색
 - 1차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방안 검토 등 하도급 업체 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 뉴타운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건설투자 활성화 유도
 - 각 사업 단계별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추진 과정에서 법률 분쟁 최소화 방안 제시
- 건설 현장으로 유능한 청년층의 진입 촉진을 위한 방안 모색
 - 청년층의 취업 기피 요인을 분석하고 직업 전망을 제시하는 등 단계적 접근전략 강구
- 뉴 노멀(New Normal) 시대를 맞아 건설업체들이 지향할 수 있는 적절한 롤 모델(role model) 제시
 -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사회적 신뢰 회복 및 새로운 사업 영역 개척

■ 건설투자의 적정 수준 유지, 기업 친화적 사업 여건 조성, 합리적 제도 개선에 초점

- 위기에 처한 건설산업이 국민경제 발전에 보다 적극적인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한 투자 수준의 유지 및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에 역량 집중

권오연(건설산업연구실장·연구위원·ohkwon@cerik.re.kr)

해외건설 · 녹색건설 등 기업 현안 분석 및 솔루션 제시

- 2020년 국내외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별 트렌드 분석도 동시 수행 -

■ 2011년 국내 건설기업의 핵심 키워드 : ‘해외건설’ · ‘녹색건설’ · ‘건설산업의 10년 후 좌표’

- ‘해외건설’ · ‘녹색건설’ · ‘건설산업의 10년 후 좌표’ 등 국내 건설기업이 당면한 현안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연구 및 컨설팅 활동을 통한 현장 및 기업 지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
 - 녹색건설 등 신성장 상품의 실행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시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 및 세미나 활동 강화
 - 특히, 새로운 10년을 맞는 2011년에 ‘국내 건설산업의 향후 10년 좌표’를 정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진화 과제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할 계획임.

■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 역량 강화 도모

- 국내 건설기업은 국내 건설시장의 지속적인 축소에 따른 대체시장으로 해외 건설시장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음.
 - 지난 2010년 716억 달러의 해외 수주와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4.3%의 점유율(ENR지 발표 2009년 매출 실적 기준)로 세계 8위를 기록하였음.
 - 주요 국내 상위 건설기업은 향후 5~10년 후의 중기 경영 수주/매출액을 현재의 약 3배 이상으로 잡고 글로벌 상위 건설기업으로 성장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은 불가피함.
- 취약한 엔지니어링 및 사업관리(PM : Project Management) 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국내 건설기업의 화두임.
 - 또한, 해외 수주 프로젝트에 대한 저가 수주 문제와 비효율적인 사업 수행으로 인한 채산성 시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내 공공 및 민간 건설기업의 현안을 분석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연구 및 컨설팅 사업을 수행. 이를 통해 획득한 지식과 정보를 산업계와 공유·전파할 수 있는 세미나 등의 다양한 장을 마련할 계획임.

-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사업관리체계 구축, 국내 건설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해외건설시장 진출방안, 원전 건설사업의 정보화 수준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공정혁신 성공사례 등의 분석과 시사점 분석 추진

■ 녹색건설의 실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 정부는 녹색인증제도를 2010년 도입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녹색기술과 관련한 사업과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고 있음.
 - 건설업체는 새로운 먹거리로 녹색건설 시장이 조기에 형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 직접적인 수주와 매출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음.
- 2010년에 녹색건설의 실행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건설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가계약법」의 개정 사항을 제안하였음.
 - 또한, ‘녹색건설비용(Green Cost)’에 대한 예산 확보 등 녹색건설 실행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더욱 시급한 과제임.
 - 선진 국가의 사례와 달리, 현행 건축 중심의 녹색건설에서 도로 · 항만 등 국내 인프라 시설에 대한 녹색건설 적용의 확대가 미진, 국내 공공공사에서의 녹색건설 활용 미흡
- 해외 녹색 인프라 인증 사례와 향후 전망, Green Cost 등과 같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녹색건설과 관련한 국내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임.

■ 국내 건설산업의 향후 10년 좌표 정하기와 선진화 방안 모색

- 단기적 성과에 맞춰진 정부의 선진화제도 개선방안에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향후 10년의 국내 건설산업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함.
 - 특히, 순수내역입찰방식 등과 같이 제도의 도입 사유와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도입한 제도의 당초 기대 효과의 발현이 어려워진 부분도 있음.
- 이러한 현안과 관련하여 ‘2020년 국내 · 외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별 트렌드 분석’, ‘공공공사 비효율적 요인 상호 연관관계 분석’, ‘국내 CM/PM 시장 주요 현안과 향후 아젠다’, ‘순수내역입찰방식의 본질과 도입 기반 환경’ 등의 연구를 수행할 예정임.

이영환(건설관리연구실장 · 연구위원 · yhlee@cerik.re.kr)

미래를 생각하는 힘이 곧 경쟁력

- ‘다양한 가능성의 미래를 구상하고 대안을 생각하는 힘’ 키워야 -

■ ‘미래를 생각하는 힘’이 가름한 기업의 흥망성쇠

- 세계적 에너지기업인 셸(Shell)사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고 대안을 준비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은 대표 사례로 언급되고 있음.
 - 1965년 석유에너지기업인 로열더치셸(Royal Dutch Shell)은 ‘에너지 위기 시나리오’를 작성, 여러 위기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대비책을 준비함.
 -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하고, 이어 아랍석유수출국기구(OAPEC : Organization of Arab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의 석유 생산 제한 및 수출 금지로 1차 오일 쇼크가 발생함. 이 시기에 중동산 원유는 1년간 4배 가까이 가격 상승함.
 - 그러나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던 셸사는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있었으며, 이것이 당시 정유회사 7위 기업이었던 셸이 2위 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됨.
 - ‘에너지 위기 시나리오’가 작성된 1960년대는 유가가 안정되어 있고, 미국이 호황을 누리던 시기로 현실과 동떨어져 보이는 위기 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준비가 돋보임.
- 반면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이 기업의 위기가 된 사례로 웨스턴유니언사의 사례가 있음.
 - 1876년 벨은 전화기 특허권을 당시 최대 전신회사였던 웨스턴유니언사에 매각하고자 했음. 웨스턴유니언사는 전화기의 기술적 단점에 대해 지적하며 제안을 단번에 거절하였고, ‘그 전자 장난감으로 할 것이 없다’라는 말을 남겨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음.
 - 이후 벨은 벨전화회사를 설립하였고, 벨전화회사는 미국 최대 통신업체인 AT&T사로 성장함. 웨스턴유니언사가 벨의 제안을 거절한 약 30년 뒤인 1910년 AT&T사는 웨스턴유니언사의 경영권을 인수함.
 - 웨스턴유니언사는 당시 주요 시장인 전신·전보 서비스시장에 집중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렸던 것이나, 이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회를 잃은 것이 됨.

■ 미래를 생각하는 힘이 필요한 시대

- 현 시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빠른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여기에 최근 급속히 확대된 글로벌화로 세계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음.

-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원유가 및 원자재의 급등락, 자연재해, 국가별 소요사태 등 각종 위협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 사건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와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서는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주어지며, 미래를 생각하는 힘은 개인, 기업, 산업, 국가의 모든 차원에서 더욱 중요한 일이 됨.

■ 다양한 가능성의 미래를 구상하고, 올바르게 적절한 전략 수립해야

- 개인의 상상, 직관, 통찰에서부터 기업, 국가차원의 과학적인 연구까지 미래의 모습은 다양한 영역에서 제시되고 있음.
 - 19세기 쥘 베른(Jules Verne)의 소설*에서부터 엘빈 토플러, 피터 드러커 등 세계적인 석학들의 통찰까지 미래에 대한 예측은 때로는 놀랍도록 정확함.
 - 미래에 대한 준비가 곧 기회가 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의 미래 연구도 일찍이 시작되었음.
 - 미래 연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는 미국 국가정보위원회(1979), 영국 미래전략처(2002), 핀란드 미래상임위원회(1993), 호주 2020 미래최고회의(2008),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2004) 등**이 있음. 국내에서는 2008년 대통령 직속의 미래기획위원회가 구성됨.
- 미래는 현재의 대응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 것이므로 예측된 어떤 미래도 확실한 미래로 단언할 수 없음. 따라서, 현재 모습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로부터 미래의 변화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 또한 필요함.
 - 세계적인 미래학자 짐 데이터(Jim Dator) 교수는 ‘미래 연구’란 ‘정확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한 복수의 미래를 구상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라 하였음.
 - 또한, 미래는 예언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으로, 설계된 미래 역시 끊임없이 재평가하고 다시 그려야 할 것을 강조함.

성유경(연구원 · sungyk@cerik.re.kr)

* ‘해저 2만리’, ‘지구속 여행’, ‘달세계여행’, ‘20세기 파리’ 등의 쥘 베른 소설에는 원자력핵 잠수함, 우주여행 등 20세기의 기술이 상상되었음. 그 중 ‘20세기 파리’는 전 세계를 연결하는 통신망, 가스로 가는 자동차, 초고속열차 등 100년 후의 미래에 대하여 상당히 정확한 묘사를 선보인 소설로 알려져 있음.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선진국의 미래전략기구 분석과 시사점, 국가미래전략Brief, 2008.10.10, pp.3~11.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및 세미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3.2	한국세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세무사회 주최 ‘세무포럼 세미나’에 토론자로 건설경제연구실 이홍일 연구위원 참여 제2주제 ‘건설업 경영 실태 및 실태조사 현황과 개선점’에 대한 토론에 패널로 참석
3.3	서울특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심사담당관실 주최 전문가 자문회의에 건설관리연구실 이복남 연구위원 참여 서울 방배동 종합문화센터 건립공사의 낙찰자 선정시 설계 및 시공 기술 배점 조정 등 낙찰자 결정 방식에 대해 자문
3.4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수급정책과 주최 ‘건설근로자 고용대책에 관한 자문회의’에 참여 ‘건설 근로자의 적정임금 확보 및 지급 방안’ 연구용역과제 관련 담당 국 및 과 변경에 따른 업무 협의
	뉴코리아포스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코리아리포스트지 주최 ‘공공관리제도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두성규 건설경제연구실장 참여 공공관리자제도 도입 이후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문

■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 과정’ 개설

- 교육내용 : 민간투자사업(BTO/BTL)에 대한 이해와 추진 전략, 사업성 분석 및 제도 등 실무 중심
- 교육일시 : 2011년 3월 23일(수)~25일(금)
- 교육장소 : 건설회관 9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수실
- 교육대상 : 건설 및 유관업체의 민간투자사업 부서 실무자
- 문의 및 참조 : 교육팀(02-3441-0671) 또는 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

■ 연구원 대표 주간지 「건설동향브리핑」 300호 발행

- 2001년 9월 발간된 이래, 건설업체 CEO 및 실무자, 건설 관련 전문가, 관련 정부부처 실무자들에게 건설산업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온 「건설동향브리핑」이 3월 7일 제300호를 발행하였음.
- 「건설동향브리핑」은 경제 동향, 정책·제도 및 경영 관련 정보는 물론, 건설산업 외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창간 당시 격주로 발간하였으나, 독자들의 시의성 있고 다양한 정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09년부터 주간으로 변경하여 발간하고 있음.

건설산업의 미래를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건설동향브리핑」은 2001년 9월, 건설산업 내의 건설업체 CEO 및 임직원, 정책실무자, 건설산업 관련 전문가들에게 건설산업 관련 정책·제도, 경영, 기술 및 기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창간되었다. 처음에는 격주로 발간되다가 2009년 이후 매주 발간하면서 연구원에서 발간되는 가장 빠른 정보 전달매체로 자리매김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9월에 연구원 홈페이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원 발간물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 단연 그 활용도와 인지도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연구결과물로 인정받기도 하였다.

건설산업은 다른 어느 산업보다 정책·제도적 요인들에 의해 시장이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다. 또한 건설산업은 그 생산기간이 길고, 생산방식 및 생산요소 등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산업이다. 따라서 건설산업에 대한 정책·제도의 변화 동향에 대한 이해와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생산, 유지관리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폭넓은 정보와 지식은 매우 중요한 산업 경쟁력의 한 요소라 하겠다. 따라서 「건설동향브리핑」은 다양한 건설산업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요약된 정보로 전달하는 매체로서 산업에 꼭 필요한 정보지라고 하겠다.

「건설동향브리핑」이 그동안 다루었던 내용은 입낙찰제도 및 발주제도, 건설인력, 건설자재, 건설경영, 건설기술, 사업관리, 해외건설 등 건설산업 내 거의 모든 분야의 이슈들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정보마당’ 섹션을 통해서는 건설은 물론, 타 산업, 사회의 유용한 정보를 많이 다루었다. 그동안 「건설동향브리핑」에서 가장 많이 다루었던 내용은 단연 정책·제도 관련 현안들이다. 그런데, 과거에 다루었던 내용들을 들여다 보면, 일부 현안들이 반복되어 이슈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최저가낙찰제 및 턴키대안입찰제도, PQ제도 등 입낙찰제도의 선진화, 품셈 및 실적공사비제도 개선,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등 중소건설업 지원 정책, 건설 및 주택·부동산시장 규제 철폐, 시장 축소에의 정책적 대응 등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이들 현안들은 건설산업 내에서 반복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건설산업 관련 정책·제도의 선진화와 반 시장적 규제의 완화는 건설산업이 존재하는 한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와 현재의 현안들에 지나치게 얽매었다 보면 결국,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요원한 것이 된다. 좀 더 건설산업의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성장과 발전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건설동향브리핑」 300호 발간에 즈음하여 향후에는 건설산업 내에서 건설산업의 미래 발전방향과 지속 성장가능성이 활발히 논의되어, 「건설동향브리핑」을 통해 이와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전달되고 공유되기를 기대해본다.

김흥수(원장 · infra@cerik.re.kr)